

세계도시

2007. 1. 1 제158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일본의 거버넌스 사례: 요코하마市の 지구계획과 행정의 역할

도시경영·경제

1. 관내 구청별 행정비용 비교 책자 발간 (베를린)
2. 획기적인 창의관광(Creative Tourism) 상품 개발 (스페인 바르셀로나)

디지털 도시

3. 속도 위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영국 노섬브리아)

복지·문화

4. 고령자용 아파트 급증 (일본)

도시환경

5. 풍력, 태양광, 메탄가스 등 신에너지로 ‘자급 전력망’ 구축 (일본 하치노헤市)
6. 빌딩 보일러 점검 보고서 제출 요구 (뉴욕)
7. 2016년까지 모든 신축주택 Zero-Carbon화 계획 발표 (영국)
8. Eco-Home 증진계획 발표 (스코틀랜드)
9. 다이옥신류 배출 규제를 위해 독자적인 조례 개정 검토 (일본 미에縣)
10. 시민 및 기업참여형 풍력발전사업 추진 (요코하마)

도시교통

11. 자동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용도로 설치 및 도로 표시 (뉴욕)
12. 도로 관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로 서포터 제도’ (일본 시즈오카市)
13. 도심교통 개선에 기여하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스페인 바르셀로나)
14. 여론조사 결과 혼잡세 부과에 대한 수용력 보여줘 (뉴욕)
15. 135개 학교 통학 안전에 관한 종합보고서 완성 (뉴욕)
16. 경제 발전을 고려한 교통 20개년 정책 발표 (런던)
17. 도크랜드 경전철, 런던계획상 수상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18. 보행자를 위한 신(新)월드트레이드센터 거리 조성계획 (뉴욕)
19. 임대주택난으로 임대료 양등, 20대 노숙자 증가 (시드니)
20. 도시 4대 기능구역 설정 (북경)
21. 중심지역 공공 녹지계획 수정 (상해)
22. 집값 1980년에 비해 554% 상승 (뉴욕州)

방재·안전

23.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신분증’ 제도 시행 (뉴욕州)
24. ‘학교도움단’ 활동 활성화로 어린이 안전에 기여 (요코하마)
25. 시민에게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베를린)

<벤치마킹 사례>

일본의 거버넌스 사례: 요코하마市の 지구계획과 행정의 역할

<주요 내용>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도시계획 프로세스를 변화시켰다. 지방분권에 부합되게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체)과의 수평적 협의,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체) 도시계획 심의회의 법정화, 다양한 분야의 조례로의 위임 등의 구체적인 변화가 2000년 도시계획법의 변화로 나타났다. 종래 기관위임사무(전형적인 중앙집권 방식의 사무처리)의 집행주체였던 도도부현 중심의 도시계획이 자치사무로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시정촌이 주역이 되도록 조건이 정비됐다. 일본에서는 시정촌의 합병과 함께 사무 위임 및 위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담당자는 행정이어야 한다는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 내부에서만 도시계획을 운용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만이 아니라 주민과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청이 늘고 있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방분권은 지역에 더욱 밀착한 주민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택을 지역에 맡겨 자기 책임으로 도시계획을 진전시키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지구계획의 주민 참가는 발의 단계, 학습 단계, 입안 합의형성 단계, 행정절차 단계 등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데, 합의형성의 원활화와 조직 만들기, 기술 지원 등에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로 지구계획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요코하마市를 들 수 있다.

중고층 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코하마市는 '마을의 룰 만들기 상담센터'를 2002년 9월 12일에 개설, '지구계획'이나 '건축계획'의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맨션(일본에선 아파트를 칭함) 건설이 문제를 낳기 전에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규율할 룰을 조기에 만들도록 노력했다는 점은 지구계획을 활용해 분쟁의 소지를 해소한 예다.

또 市는 개별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맨션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려는 주민들의 상담에 대응해 직원이나 코디네이터(도시계획 전문가)를 파견해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350만 명이 넘는 요코하마市는 상담센터를 市 본청에 설치하고 4개의 지부(중부, 남부, 서부, 북부)를 두고 시민의 마을 만들기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2004년까지 300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해설 및 평가>

일본은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는 법·제도적 조건이 정비되고 있다. 즉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슬림화와 역할 이양을 통해 도도부현이나 시정촌과 수평적 정부간 관계가 형성되도록 인프라를 정비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제도와 같이 지역주민 참가와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행정 영역에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룰 만들기 센터'와 같은 조직을 구성했다. 행정도 거버넌스라고 해서 방관자적인 입장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나 사회 인프라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입장임에도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이나 자치적 역량 향상을 위한 광역정부적인 노력이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평적인 정부간 관계의 역량을 갖추므로써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거나 역할중복적인 중앙-지방 관계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을 공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자기 선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주민참여란 관점에서 방치돼 있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마다 형성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공식적 지역커뮤니티 단체가 도시지역의 행정 참가와 행정 운영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일본 요코하마시의 거버넌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분권이나 시민 참가라고 해서 행정이 수동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대응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문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마을의 료 만들기 상담센터와 같이 지역주민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와 지역문제 전문가를 배치해 이에 대한 자문과 상담에 응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수천 개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지역커뮤니티 조직이 있다. 이 조직들이 각각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주민이나 지역커뮤니티의 자치능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일본의 마을 만들기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벤치마킹은 서울과 같은 도시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구분이 애매한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1. 관내 구청별 행정비용 비교 책자 발간 (베를린)

베를린市 경제부는 2006년 12월 1일 관내 구청별 행정비용을 비교한 책자 「베를린 구청별 행정비용 비교: 2005년」을 발간했다. 비록 베를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같지만(예를 들어, 베를린市에서 개인 신분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구청 공통적으로 8유로<약 9700원>이다.) 구청별로 실제 소모되는 행정비용은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된 보고서는 2001년부터 6년째 매년 출간되고 있다.

분석의 기초자료는 2005년 한 해 동안 구청별로 발급된 서비스비용 영수증이며, 이에 덧붙여 인건비에서부터 행정사무비용까지 모든 금액을 포함해 개별 행정 '상품'의 비용을 산정했다. 이를 통해 어떤 구청이 같은 서비스더라도 좀더 경제적으로 제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발급 서비스의 경우 각 구청별로 18유로(약 2만 2000원)에서 23유로(약 2만 8000원)까지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평균은 약 21유로(약 2만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발급 서비스 이외에도 주민등록 비용, 여권 발급 비용, 각 구청 도서관의 책 1권당 대출 비용 등 다양한 행정상품 비용을 산정하고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다. 市 경제부 장관인 티로 자라진(Thilo Sarrazin)은 이 책자를 통해 한정된 市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구청이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市 경제부 웹사이트(www.berlin.de/sen/finanzen/haushalt/bezirke/index.htm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berlin.de/sen/finanzen/presse/archiv/20061201.1245.51377.html)

>>> 전문가 검토의견

행정의 효율성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의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고된다. 베를린市는 각 구청의 행정서비스 항목별 단위당 비용을 비교 공시함으로써 각 구청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서울市에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각 구청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당 행정서비스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공통된 지표 기준을 서울市에서 제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서울市를 더욱 글로벌한 도시정부로 만들 것이다.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2. 획기적인 창의관광(Creative Tourism) 상품 개발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2005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3% 증가했는데, 총 관광객 수는 442만 7186명으로 나타났다. 단기여행자는 13.6% 증가했다. 바르셀로나市 당국은 여름을 제외한 관광 비수기의 관광객 수 증가에 고무돼 있다. 市 당국은 비수기에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비즈니스와 각종 회의 관광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광사업 성장의 주요한 열쇠는 높은 질의 관광상품 제공에 있다. 市 당국과 관광부서는 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2개의 신관광사업 방침을 발표했다. 하나는 카탈로니아語 학습과 관련된 방문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식가와 음식을 위한 방문이라는 장르를 개척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베일을 벗은 독창적인 관광포털사이트(www.barcelonacreativa.info)는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행객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바르셀로나 예술인단체와 워크숍을 가질 수 있으며, 공동 연주 및 페스티벌 참여, 콘서트 및 사진 콘테스트 참여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여행객은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예술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기회, 예술협회나 단체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질의해 그 가능성을 타진 하며, 이 웹사이트는 여행객이 원하는 관광을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3.bcn.es/fitxers/premsa/bul245.113.pdf)

(www.barcelonacreativa.info/principal.asp?cadena=engque.asppqqqqengqqqq)

>>> 전문가 검토의견

관광마케팅의 핵심은 창의적이며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달렸다. 관광은 계절요인이 크게 작용해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관광 비수기 타개책은 바로 계절요인을 배제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와 컨벤션 관광진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컨벤션, 전시 등의 각종 행사를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울관광안내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콘텐츠를 보면 일방적인 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이다. 외국인들이 서울관광안내 사이트에 방문해 서울관광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소감, 제안, 문제점과 같은 의견이나 질문을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시 당국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기회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금기용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디지털 도시

3. 속도 위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영국 노섬브리아)

영국 노섬브리아(Northumbria) 지역의 Safety Camera Partnership이 지역 내 교통감시 카메라에 찍힌 속도 위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 범칙금 부과 행정이 더욱 투명하게 됐다. Northgate Information Solutions社가 개발한 시민 열람시스템(Public Access System)은 범칙금 통지를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현장 사진, 속도, 위치 정보와 카메라의 보정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2006년 10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Safety Camera Partnership이 관할하는 노섬브리아 지역에서 범칙금 관련 정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졌다. 최근 지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해당 정책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983&mode=thread&order=0&thold=0)

4. 고령자용 아파트 급증 (일본)

일본에서는 양로원에 대한 대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택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4월 개호보험(介護保険: 노인·장애인 보험)법 개정으로 유료 양로원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게 됐다. 양로원이 너무 증가하면 지자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개호보험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고(兵庫)현 아시야(芦屋)시 등은 아예 유료 양로원의 시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오사카(大阪)시 JR 벤텐초(弁天町) 역 앞에 완공된 200m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크로스 타워 오사카 베이’는 부지 내에 고령자용 아파트(93실)와 연중무휴 진료시설, 유료식사 배송, 자택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키(近畿, 교토를 중심으로 한 지방)와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같은 구조로 50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긴키에서는 2006년에 분양되는 고령자용 아파트가 전년도에 3배인 200호를 넘어서고 2008년에는 780호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saka.yomiuri.co.jp/eco_news/20061210ke01.htm)

5. 풍력, 태양광, 메탄가스 등 신에너지로 ‘자급 전력망’ 구축 (일본 하치노헤市)

일본 하치노헤(八戸)시는 메탄가스, 태양광, 풍력 등의 신에너지를 조합한 ‘자급 전력망’(自給電力網) 구축에 도전하고 있다. 전력회사에 거의 의지하지 않고 학교 4개교와 시청 등 관공서의 전력을 실제로 조달하고 있어 시가지에서의 실증 연구로서는 세계 최초의 시도다. 이 연구는 독립 행정법인인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의 위탁을 받아 市와 미즈비시 종합연구소, 미즈비시 전기가 공동으로 200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력망이 아니고 약 2km 범위 내의 소규모 자급 전력망(micro grid)을 구축해 그 범위에서 에너지를 제어하는 특징이 있다. 태양광 발전(최대 출력 80kW)과 풍력 발전(최대 출력 20kW)에, 자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에너지로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최대 출력 510kW)을 추가로 도입했다. 하수처리장에는 주력 발전소를 뒤 잉여 전기를 충전하는 납축전지도 도입했다. 전력 공급처는 초·중학교 4개교와 시청 본관, 광역사무조합 청사 6곳이다. 송전용으로 지하 케이블 1.2km와 전용 전주계(專用電柱計) 119개를 사용한 전력선 4.2km를 새롭게 부설했다.

(www.yomiuri.co.jp/e-japan/mirai/mi_mi_06120201.htm?from=os4)

>>> 전문가 검토의견

도시지역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소비처로 인식돼 왔으나, 자급 전력망을 구축하려는 하치노헤市の 시도는 도시는 곧 에너지 소비처라는 생각을 버리고 도시도 에너지를 생산해 자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주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하치노헤市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작지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해 서로 연결하는 망을 구축하면 에너지 자립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장은 에너지 대량소비처지만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하수 열을 회수해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뿐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서가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의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6. 빌딩 보일러 점검 보고서 제출 요구 (뉴욕)

뉴욕市 주택 소유주는 2007년 1월 2일까지 보일러 점검 보고서를 市 빌딩국(Department of Building)에 제출해야 한다고 뉴욕市가 2006년 12월 6일에 발표했다. 이는 뉴욕市 노동법규(Local Law 62/91 and Chapter 31, Article 7, Section 204 of the New York State Labor Law)에 따라 6 유닛 이상의 거주용 건물, 주상복합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소유주가 매년 제출하던 점검 보고서로서 환경 및 에너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뉴욕市는 2006년부터 市 환경 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이 3년마다 독립적으로 시행하던 보일러 점검 보고와 통합해 연 1회의 새로운 보일러 관리체계를 시행했다. 수수료 30달러(약 1만 8600원)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1500달러(약 138만 원)가 부과된다.

(www.nyc.gov/html/dob/html/forms/forms_boilers.shtml)

7. 2016년까지 모든 신축주택 Zero-Carbon화 계획 발표 (영국)

영국 정부는 최근 의회연설을 통해 2016년까지 영국 내에 짓는 모든 새로운 주택을 Zero-Carbon 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새롭게 짓는 Zero-Carbon 주택에는 세계 및 용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혁신적인 친환경기술(Innovative Green Technology)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영국 주택협회와 환경단체는 좀더 과감한 세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Zero-Carbon 주택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비록 시작단계지만 세계 혜택은 Zero-Carbon 주택 건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Planning, 2006. 12. 8)

8. Eco-Home 증진계획 발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0년까지 지을 모든 임대주택이 최상급의 Eco-Home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활용계획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Eco-Home과 관련해 단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가계 지출도 함께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설계 가이드라인, 커뮤니티 당사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지역주민 소유의 녹지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Planning, 2006, 12, 7)

9. 다이옥신류 배출 규제를 위해 독자적인 조례 개정 검토 (일본 미에縣)

일본 미에(三重)현은 2006년 12월 6일 보일러 등의 연료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시설의 다이옥신류 배출 규제를 위해 '縣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했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석유나 석탄,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옥신류를 규제하는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아니다. 폐기물 소각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법'의 대상도 아니다. 향후 석유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포함 고형물을 연료로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縣이 먼저 조례 개정을 검토했다. 다이옥신류의 배출을 기준치이내로 하기 위해 플라스틱류의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배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규제할 방침을 굳혔다. 보일러뿐 아니라 요업 관계의 소성로, 금속의 용해로 등 규제 대상의 확대도 검토한다.

(chubu.yomiuri.co.jp/news_kan/kan061207_5.htm)

10. 시민 및 기업참여형 풍력발전사업 추진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환경행동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연에너지의 이용 촉진과 지구온난화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임해부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요코하마市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요코하마市 풍력발전사업의 취지에 동의해 '그린 전력 증서' 도입에 협찬할 기업(Y 그린 파트너 기업)을 모집한 결과, 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15개 회사와 그룹이 응모했다. Y 그린 파트너 기업은 환경경영 의식이 높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참여기업이 많았다. 요코하마市 풍력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시장공모채' 발행을 통한 시민참여와 '그린 전력 증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기업 참여를 통해 시민, 사업자, 행정관청의 3자가 협동해 추진되고 있다.

(www.city.yokohama.jp/ne/news/press/200612/20061206-020-629.html)

한줄 뉴스

- 뉴욕, 市의회에서 단행한 세율 조정에 따라 주택 재산세 7.1% 인상
- 베를린,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및 교통제정에 관한 회의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재정여건 고려 주장
- 동경 아메요코 재래시장 번영을 위해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 여성부에서 경품 추첨행사 개최
- 북경市 교통위원회 2007년 2월 1일부터 3종류의 대중교통 단기 정액권 판매하기로 결정
 - 3일권 10위안(약 1200원, 3일 내 18회 이용 가능), 7일권 20위안(약 2400원, 7일 내 42회 이용 가능), 15일권 40위안(약 4800원, 15일 내 90회 이용 가능)
- 스웨덴 스톡홀름市,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타이어 압력조절 운동 전개
 - 연간 700만 리터의 연료를 절약하고 1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어

11. 자동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용도로 설치 및 도로 표시 (뉴욕)

2006년 12월 8일 뉴욕시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새롭게 디자인된 3등급(Class 3) 자전거 도로를 소개했다. 시 교통국은 이 도로가 자전거 통행자 및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통행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도로표지 및 표시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그림과 자동차 그림을 각각 도로 위에 표시했고 자전거 그림 위에는 '자전거 도로'(Bike Route)로, 자동차 그림 아래에는 '혼용도로'(Shared Lane)로 각기 표시했다. 새롭게 단장된 자전거 도로는 맨해튼 타임스퀘어(Times Square)와 그랜드가(Grand Street), 브루클린(Brooklyn)의 5번가를 따라 설치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은 뉴욕시의 도로 사정을 고려해 이 혼용도로가 설치됐으며, 이미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혼용도로의 효과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뉴욕시 자전거 통행 보장을 위해 앞장선 시민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Transportation Alternatives) 이사장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새롭게 정비된 도로와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통행자도 새롭게 정비된 도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교통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통행자 스스로 자동차 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야간통행 시 필요장비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 통행 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www.nyc.gov/html/dot/html/about/pr2006/pr06_7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외에 자전거와 자동차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자동차 겸용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볼 수 없을 뿐이다. 뉴욕시와 같이 서울시도 자전거를 차도부에서 적극 이용하게 될 경우 제한된 도로공간을 고려할 때 자전거와 자동차가 혼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뉴욕시 사례를 참고해 시행해볼 만하다.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12. 도로 관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로 서포터 제도' (일본 시즈오카시)

일본 시즈오카(静岡)시는 2006년 9월부터 '도로 서포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과 행정관청이 하나가 돼 도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 서포터는 자치회, 민간기업, NPO, 노인회, 학교 등 도로애호활동에 의욕적인 5인 이상의 단체이면 가능하다. 도로 서포터는 도로 청소, 도로시설의 가벼운 보수 활동, 도로 손상 정보 제공, 식목, 제초 등을 하며, 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은 시가 무상 공급한다.

(www.city.shizuoka.jp/deps/doro/dorohozen/index2.htm)

>>> 전문가 검토의견

일본 시즈오카(静岡)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서포터 제도’는 정부-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한 형태로서, PPP가 태동 단계에 있는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라는 긍정적인 모토 아래 인력 활용 및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구에 재직하고 있는 교통 전문공무원과 근린주구 단위의 학교, 노인회, 부녀회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도를 확대 정착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단체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도로 청소, 보수 활동, 정보 제공, 식목, 제초 작업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설치 제안도 함께 검토하고, 필요 시 5년 단위의 자치구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 성숙한 자치행정을 시행할 수 있어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si@sdi.re.kr)

13. 도심교통 개선에 기여하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도심부 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전거 대여 시스템(Rent-a-bike)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시행 중인, 프랑스 리옹과 영국 런던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과 유사하다. 자전거 이용자는 약 250개소의 셀프서비스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임차해야 하며, 이 대여소는 지하철역 출구 등 대중교통 연계장소 인근에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약 3000대의 자전거를 공급했으며, 어떤 대여소에서 자전거가 모두 대여돼 부족할 경우, 근처의 가장 가까운 대여소를 안내해 준다. 이러한 자전거 대여소는 300m 간격으로 있으며,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특별한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전거에는 GPS 위치시스템과 도난방지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멤버십카드는 주간카드와 연간카드가 있으며 비즈니스용의 특별카드도 있다. 대여 비용은 처음 30분은 무료이고 그 후 1시간에 1유로(약 12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바르셀로나시는 하루에 약 4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 정부는 이 새로운 시스템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w3.bcn.es/fitxers/premsa/bul244.242.pdf)

>>> 전문가 검토의견

자전거 대여시스템은 기본 전제조건이 자전거 전용 주행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 광객이 많은 런던, 워싱턴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자전거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대여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서울시에서도 티머니 카드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는 도심지역보다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 있고 이용 수요가 많은 한강둔치 시민공원에서 시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14. 여론조사 결과 혼잡세 부과에 대한 수용력 보여줘 (뉴욕)

2006년 11월 27일 뉴욕 데일리 뉴스(the Daily News)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5%가 맨해튼 60가로 들어가는 통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혼잡세 부과로 인한 수익이 버스나 지하철의 운영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45%의 응답자는 혼잡세 부과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미 링컨(Lincoln) 터널과 홀랜드(Holland)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세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에 거주하는 800여 도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의 응답자만이 혼잡세 부과 개념에 대해 친숙함을 나타냈다. 80%의 응답자는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밝혔는데, 이중 53%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59%의 응답자가 현재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교통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다. 77%의 응답자가 혼잡세 부과로 도시 전체의 소음과 공기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들 대부분은 혼잡세를 부과하면 응급상황 시 차량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직장인 6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4%가 자동차 통근을 한다고 밝혔다.

(www.gothamist.com/archives/2006/11/27/survey_finds_ny.php)

15. 135개 학교 통학 안전에 관한 종합보고서 완성 (뉴욕)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통국장 및 교육국장은 2006년 11월 30일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통행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135개교에 대해 학교별 교통사고 추이를 토대로 안전한 통학로 지도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교통국은 이번에 조사된 통계를 바탕으로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135개 공·사립 초·중학교에 대한 추가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 교통국 또한 자체적으로 40개 고등학교에 대한 유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 발간과 발맞춰 도로네트워크, 학교 위치, 안전 시설물을 포함해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주는 학교 안전 지도와 학생 및 학부모의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가이드, 교통안전 수업가이드도 아울러 출간했다.

(www.nyc.gov/html/dot/html/safety/saferoutes.html)

16. 경제 발전을 고려한 교통 20개년 정책 발표 (런던)

런던시와 런던교통공사는 런던시 교통 20개년 계획인 T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20년 내에 런던 경제는 90만 개의 일자리와 80만 명의 인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때 일일 400만 회의 추가통행이 발생하며 새로운 일자리 중 30만 명은 도심(시티, 웨스트엔드, 도크랜드)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계획에는 경제와 인구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운영,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자전거 및 도보 장려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0009)

17. 도크랜드 경전철, 런던계획상 수상 (런던)

런던교통공사 소속 도크랜드 경전철이 런던계획상(London Planning Award)의 공공기관 계획 최우수상(Best Public Sector Planning Organisation)을 수상했다. 도크랜드 경전철은 역과 연계된 인도를 건물 및 도로 소유주 등과 협의해 주민 편의에 맞게 재조성하고, 지역사회 대사(Community Ambassador)를 임명해 경전철을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정책을 적극 추진해 노선 확장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1년 동안 55만 명의 이용객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고객만족도가 95%에 달해 개발과 운영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런던 동부 신도시 도크랜드를 가로지르는 경전철의 모습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959)

도시계획·건설·주택

18. 보행자를 위한 신(新)월드트레이드센터 거리 조성계획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 토지소유기관이자 재개발 책임 담당기관인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는 새롭게 조성될 월드트레이드 구역을 친(親)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2006년 11월 30일 발표하고 사업제안서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중앙을 가로지르는 풀턴가(Fulton Street) 및 그리니치가(Greenwich Street)를 복원하고 자유가(Liberty Street)를 재배치하며, 현재의 베시가(Vesey Street) 및 처치가(Church Street)에 보행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조성될 자유공원(Liberty Park)에 계단 및 층계식 벤치, 투명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잔디와 나무로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보행공간은 예전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내 토빈광장(Austin J. Tobin Plaza)의 외부 차단성 문제를 제거해 월드트레이드센터 주위를 더욱 활기찬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www.nytimes.com/2006/12/07/nyregion/07blocks.html?_r=1&ref=nyregion&oref=slogin)

19. 임대주택난으로 임대료 양등, 20대 노숙자 증가 (시드니)

시드니 임대주택 공실률(vacancy rate)이 9년 만에 최저인 1.5%로 임대주택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임대난 심화로 임대료를 경매로 결정하는 렌탈 경매(rental auction)까지 등장,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또 상당수 세입자가 임대료를 감당 못해 불편을 감수하면서 셰어(share, 공동 거주)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임대 광고가 게재되자마자 며칠 안에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다. 상당수 미혼 청장년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면서 분가를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임대주택난으로 사회 현상마저 바뀌고 있다.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20대가 노숙자로 전락함에 따라 시드니 노숙자의 절반 정도가 20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 도시 4대 기능구역 설정 (북경)

북경市 제11차 5개년 계획 중 기능구역발전계획(功能区域发展规划)이 2006년 12월 6일 정식으로 발표됐다. 향후 5년 내에 북경市에는 수도기능핵심구역, 도시기능 확장구역, 도시발전 신(新)구역, 생태함양 발전구역 등 4대 도시기능구역이 조성된다.

수도기능 핵심구역에는 산업시설과 구(舊) 시가지 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정치, 문화, 외교, 관광, 문물과 관련된 기능이 특화된다. 도시기능 확장구역에는 인구, 도시 중심 지역이 형성된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와 서부 발전에 주력하고 인공과 공업지대 요충지로 개발된다. 도시발전 신(新)구역에는 신도시 건설이 중점 추진된다. 공공서비스 체계 정비와 생활, 교육, 의료, 문화, 여가 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육성한다. 생태함양 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고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엄격한 개발 규제가 시행된다. 이와 같은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북경市의 도시 기능과 친환경 기능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www.bjd.com.cn/bjxw/ssqx/200612/t20061207_132113.htm>

21. 중심지역 공공 녹지계획 수정 (상해)

2006년 12월 6일에 중국 주요도시 도시계획 업무회의가 상해市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따르면 상해市의 경우, 도시외곽 순환고속도로 이내(市 중심지역)는 이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공공녹지 140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현재까지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상해市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줄곧 도시 건설에 큰 성과를 얻었지만 중심 지역의 인구 집중과 환경, 자원, 교통 시설의 부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 ① 상해市는 중심 지역에 공공녹지와 공공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건축 용적률과 건축물 총량을 더욱 줄여나간다.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市 중심지역의 상업과 업무시설 용적률은 각각 400%와 250%를 넘지 못한다.
- ② 市 중심 지역 내 약 62%의 역사유산 보호 프로젝트(이미 관련 계획에 따른 승인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건설부분을 승인받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건축설계 방안에 대한 심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전체 계획량을 17% 이상 낮추도록 한다. 엄격한 건축 용적률 적용과 함께 전체 총량을 40% 이상까지 낮추도록 한다. 이에 따른 부분 건설 프로젝트는 각 계획의 요구사항에 따라 건축 총량을 더욱 낮추도록 한다.
- ③ 새롭게 증설되는 140만㎡의 녹지공간 이외에도 소주하(蘇州河, 상해市를 관통하는 하천 중 하나) 연안에 공공보행도로 4.5km가 증설된다. 최근 이 도로는 이미 88% 이상이 개통됐다.

(www.shghj.gov.cn)

22. 집값 1980년에 비해 554% 상승 (뉴욕주)

미국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택산업감독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분기 뉴욕주 집값은 지난 1980년에 비해 554% 올랐다. 26년 만에 집값이 5배 이상 오른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해서는 68% 상승했고 2005년보다는 6% 올랐다. 지난 1년간 6% 상승은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51개 지역에서 30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뉴저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6년 만에 집값이 479%나 뛰었다. 5년 전보다는 81% 올랐으며 1년간 상승률은 9.19%로 전국 19위를 기록했다. 지난 26년간 가장 큰 집값 상승률을 보인 주는 매사추세츠로 62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5년간 상승률이 50%이고 지난 1년간 상승률은 1%에 그쳐 전국 49위를 기록해 주택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6년간 303%, 5년간 55%이며 2005년 한 해 동안은 7.7%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상승률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2006년 2분기 대비 3분기 전국 집값 상승률은 1.2%에서 0.86%로 떨어졌다. 뉴저지주에서는 2006년 3분기 집값이 2분기에 비해 0.78% 올라 전국 평균에 못 미쳤고 뉴욕주의 경우 0.33% 하락했다.



월드트레이드센터 복원계획도



새롭게 조성될 보행공간 조감도(자료: 뉴욕타임스)

(미주 중앙일보 보도자료, 2006. 12. 1)

23.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신분증’ 제도 시행 (뉴욕주)

뉴욕주 교육부는 州 내 31개 분야별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문가 신분증’ 제도를 마련했다. 재난이나 재해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州 교육부 담당자가 2006년 12월 1일 발표했다. 이 신분증 소지자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단지 전문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뉴욕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자동 전송받은 사진을 비롯해 이름, 서명, 운전면허증 번호, 전문분야, 전문직 자격증 등록번호, 전문직 자격증 유효 기간 등이 기재된다.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될 이 신분증은 전문직 자격증 갱신 시기에 맞춰 발급받게 되며, 신청서는 자격증 갱신 신청서와 더불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전문가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전문직 자격증의 유효기간과 같다. 두 개 분야 이상의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 분야별로 각각의 전문가 신분증을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다른 州에 거주하면서 뉴욕주에 등록한 전문가는 뉴욕주 차량국에서 전문가 신분증 발급용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뉴욕주 교육부가 담당하는 31개 전문직 분야는 한의학, 건축, 운동 트레이닝, 정력, 속기, 카이로프랙틱, 임상기술 연구, 치과, 영양사,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디자인, 토지 측량, 마사지 치료, 물리학, 의학, 정신건강, 조산, 간호, 작업 치료, 안과, 검안, 약학, 물리치료, 발 의학, 심리학, 회계학, 호흡치료, 소셜 워커, 언어치료, 수의사 등이다.

(미주 한국일보, 2006. 12. 2)

>>> 전문가 검토의견

재난이 발생해 구조나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호물자와 장비뿐 아니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서울시 재난·재해 관리체계에서도 이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전문가 신분증 제도는 재난 관리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차체에 재난에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 등의 인벤토리를 점검해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소요인력과 수급계획에 따른 전문인력 풀을 구성해 신분증 제도를 운영한다면 재난 관리뿐 아니라 서용시정에도 더욱 많은 책임감과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24. ‘학교도움단’ 활동 활성화로 어린이 안전에 기여 (요코하마)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학교도움단’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2006년도에는 204개 단체(초등학교 196, 중학교 7, 양호학교 1)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56%의 초등학교에서 ‘학교도움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도움단’은 보호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단체이며, 교문과 학교건물 관리, 학교 방문자 안내, 교내 순찰 등 학교 안전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5인 이상의 보호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에는 일반형과 특례형이 있다. 일반형은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매주 하루 이상 계속하는 경우 학교에 예산을 배정(연간 8만 엔<약 64만 원> 상한)해 방범용구 등을 학교가 단체에 대여하는 형태이고, 특례형은 하루 2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로 단체가 희망하면 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40만 엔(약 320만 원)이다.

(www.city.yokohama.jp/me/kyoiku/topics/181207-01.html)

25. 시민에게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베를린)

베를린시는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화재보호 관련 정보 제공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이 캠페인은 시민에게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안내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재 보호 포스터를 제작해 주택가에 배포하고, 올바른 대처 요령에 관한 단편 영화를 만들어 지하철 안의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또한 만화 형식으로 제작된 엽서를 800곳 이상의 장소에 비치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이 정보 제공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주택이 약 5% 정도였으나, 2006년에는 베를린 주택의 약 36%가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화 형식으로 제작된 화재 시 적절한 대처방안 정보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12/nachricht2521.html)

<런던>

- 장애인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정책이 Guardian Public Services Award의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사업 부문 혁신과 진보: 다양성과 평등상’ 수상
- 런던교통공사의 ‘You’re Better Off by Bike’ 프로그램이 Green Award의 최우수 라디오 광고, 최우수 옥외 광고 캠페인 등 2개 부문 수상
- 런던주택연합회, 주택 부족이 사회소외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보고서 발표

<호주>

- 시드니市,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6억 6000만 호주달러(약 4800억 원) 투자하기로
 - 뉴사우스웨일스州, 공립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3개월 동안 200만 호주달러(약 14억 6000만 원)를 투입한 간호사 모집 광고 실시
-